

# “광주 특별재난지역 선포·AI 예타면제 기대”

# NEWS

2025년 8월 5일 화요일

## 강기정 시장,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결과 설명 8월 국무회의서 AI 2단계 ‘AX 예타면제’ 반드시 통과 소비쿠폰 색깔 차별...인권감수성 점검안 전국화 건의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 등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인공지능(AI) 사업 추진 등의 막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결과를 설명했다.

강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준비되고 있고, 피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어룡동 피해금액은 기준금액 12억을 넘긴 14억6000만원이고, 북구의 경우 기준금액 122억을 넘어선 178억원으로 피해금액이 확정되어 최소한 북구와 어룡동 등은 특별재난구역으로 꼭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께도 말씀드렸고, 윤 장관은 동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룡동’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빨리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돼 주민들에게 위로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또 상습 침수지역 대책에 대해서 “24m 관로와 12m 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12m 관로가 물을 밀어내지 못해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주민들이 고발한 신고

물막이 개선 여부는 종합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복개하천을 복원하는 데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고 중앙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대신 서류조를 신설하는 방안의 효과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재부·산입부·과기부 등 정부 부처 간 미세한 이견으로 AX 2단계 사업 예타면제 결정이 지연됐다”며 “AI사업에 대해 마지막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지난 6월 예타면제 가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다’고 건의한 직후 이견이 정리됐다”며 “8월 국무회의에서 AI 2단계 사업 예타면제 결정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초거대 AI 컴퓨팅센터 공도도 대통령께 건의한 만큼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내일 구윤철 기재부 장관을 만나 구체적으로 다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소비쿠폰 색깔 논란에 대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점검해

5개 분야 42개 정책을 발굴해 조치하고 있음을 대통령께 설명해 드렸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벌써 그렇게 했냐’고 답변하셨다”며 “인권 감수성 점검안의 전국화도 건의드려 행안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의 통합돌봄 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메인 정책 상품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휴가를 반납하고 광주 정책의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잇단 극한 호우와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하계휴가를 취소했다. 강 시장은 당초 4일부터 8일까지 하계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광주 가연 선풍기물류연료화시설(SRF)을 둘러싼 분쟁 해결 등을 위해 7~8일로 연기했다가 추가 현안과 정당 일정 등이 겹치면서 휴가를 백지화했다.

강 시장은 이날 서울에서 광주SRF 운전자 측 대표인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들을 만난 예정이다. 5일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안규백 국방부장관과의 면담도 마련해 군 공항, 탄약고 등 군사시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6일 정은경 복지부장관과 광주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에 이어 8일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광주지자 현정최고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조사 결과 등 시정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광주시, 행정 전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 발견·개선

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해 긴급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수행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5개 유형 42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

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학교 대상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사례, 수도요금 체납 시 단속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공간을 어린이 열람실로만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침해한 사례,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

어를 명시해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유발한 사례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육의노동자의 폭력 속 건강권 보호, 비주택 거주자(쫓방)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와 같은 폭력취약계층 대응책 등 기후위기·디지털 환경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이슈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기획, 제도 운영, 대시민 행정 전반에 인권적 관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 내용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공유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

## “광주·전남 폭우 피해...전폭적 지원·대책을”

### 이개호·서삼석·전진숙 공동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전진숙(광주 북구) 의원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 3일 기록적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광주와 무안, 함평 등 전남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중순 극심한 폭우 피해로 인한 복구 및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일 다시 내린 극한 호우로 시간당 140mm에 달하는 강수량을 기록한 무안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고 읍내 저지대의 주택가는 물론, 무안군청사 1층까지 침수가 됐으며 60대 남성이 숨지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또 함평군에도 시간당 50mm이상의 폭우가 내려 함평 읍내와 5일 시장 주변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며, 광주 북구의 경우 신안동 서방천 일대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또 다시 극심

한 수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세 국회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피해에 대해 긴급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규모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돕기 위한 지역 사회 및 정부, 지자체의 집중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70~90% 정도의 보상을 통해 일정 수준의 복구와 회복이 가능한 풍수해 보험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풍수해 재난을 예측해 영세 서민이나 상인들이 가입하기는 쉽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번과 같은 극한 호우로 인한 풍수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회복지원을 위한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무안과 함평, 그리고 광주지

역에서 풍수해 보험에 미가입된 영세민들과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한 수재의연금 우선 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 영세 서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의무화 및 보험료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다각화 및 이를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풍수해 보험료 지원과 보험 상품개발 등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을 만나 풍수해 보험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이개호, 서삼석, 전진숙

##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 본격 시행 전남도, 타 시·도 의료기관 시술 시 교통비 지원

전남도는 난임부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술을 지속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난임 시술은 진료, 검사 등을 위해 수차례 병원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서 시술받은 난임부부가 교통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은 전남지역에서 시술에 실패해 불

가파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 시술 차수 1회당 교통비를 전북·경남 지역은 10만원, 그 외 지역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7월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환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한 뒤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추가 시술을 받으면 시술을 받을 때마다 해당 차수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 출산 증가와 초산 연령 상승으로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시술 중단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지역 난임 환자는 2022년 6447명에서 2023년 6500명, 2024년 709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11개 사업 56억 원)을 두텁게 강화하고 있다. 가임력 검사를 정부 지원 외 추가 지원하고, 난임시술도 소득·나이·횟수 등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방 난임 치료비, 정·난관 복원 시술비, 난자 냉동 시술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난임부부가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난임 시술·약제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화를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NAVER 광주바로연 Q

바로연 바른만남 바른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주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자주 토탈서비스 센터

광주·서구·국내·09·0005호